

# 2차 베이비붐, 지방 정착 길 연다 농어촌 경제·일자리 활성화 '총력'

농식품부, 2차 베이비붐 귀촌 유도 954만명 정년세대, 농촌 유입 기대 특화산업·관광벨트로 지역경제 재건 귀촌청년 농지·어선·창업자금 지원 공공서비스·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정부가 정년퇴직 등 은퇴를 앞둔 '2차 베이비붐 세대' (1964~1974년생)의 지방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어촌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또 생활인구 유입을 장려하고 주거 여건을 개선한다. 공공 및 생활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을 쏟는다. 이를 통해 도농 간 삶의 질 격차를 대폭 줄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이하 삶의 질 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2025~2029년) 제5삶의 질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및 세부계획 수립에는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21개 부처·청 합동이 참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농어촌 인구 유입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어촌의 쾌적한 환경, 도시 대비 저렴한 토지 비용, 이른바 4도3촌(도시에서 나출, 농촌에서 사출) 문화의 확산 등이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한국은행 통계를 인용해, 2차 베이비붐 인구가 95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6% 수준이고, 1차 베이비붐 세대인 1955~1963년생(705만 명)에 비해서도 35% 많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1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공공·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등 3대 전략에 따라 12대 주요 과제 및 18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한·철레 자유무역협정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한 국내의 한 농산물 재배 현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홈페이지 갈무리

(FTA) 발효를 계기로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 후 20년간 총 4차례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했으며 총 178조 원을 투입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준 인구 2000명 미만의 읍·면을 의미하는 인구 과소지역 수가 392개소로 2000년 177개에서 배이상 늘었다. 국가 전체적 인구감소 전망과 청년층의 도시 쏠림 및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 소멸이 우려되고 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그간 4차례의 기본계획에서는,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 각 분야별로 부족한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도·농간 삶의 질 격차가 해소돼 농어촌에 사람이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일자리 부족 등에 따라 청년층의 도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공공·생활서비스는 개선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의 기본계획과 달리,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농어업·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촉진한다. 지자체가 육성하고자 하는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에 촉진할 수 있도록 농촌특화지구 내 입지 규제

를 개선한다. 또 소멸위험 농촌 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바꾸는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를 범제화한다.

외국인이 농어촌에 찾아오도록 K-미식벨트(농식품부), 동서트레일(산림청) 등 부처별 광역단위 사업을 연계한 K-농산어촌 관광벨트를 확대한다. 현재 7개소인 세계중요 농어업유산에 5년 내 14개소로 늘려 관광 자원화하는 'K-헤리티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특히, 청년들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 마을어장·양식장, 어선 및 초기 정착자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 대상 법률·세무 컨설팅 등 경영역량 강화, 농업인 유형별 기술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시·군별로 농촌을 재구조화하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다. 마을 인근 난개발 시설의 이전·철거 및 공간 재생 지원 대상을 올해 112개소에서 2029년까지 172개소로 확대한다.

또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늘봄학교를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농어촌의 특색있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한다. 비문해·저학력 고령층 대상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학교 복합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미래 인재 위한 최적 환경 만들 것”

최상목 기재부 장관, 오찬 간담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의 인재 투자가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셀트리온, 신세계아이앤씨 등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9곳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서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래 인재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말했다. 또 “최근 청년 고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의 인재에 대한 투자가

더 큰 결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토양을 만드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정부는 규제개선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도 본격 가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문수 장관은 “일자리란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고용부는 우수기업 모델을 확산·지원하기 위해 지방 관서에서 지역 내 우수기업을 1대1로 전담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컨설팅 사업을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으로 개편·통합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고도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제작년 임금근로자 금융회사 빚 5150만원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 발표

지난 2023년 기준 직장인이 금융회사에 진 빚이 1인 평균 5150만 원에 달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3년 일자리행정통계(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기준 임금근로자 평균 대출은 전년 대비 0.7% 늘어난 515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직장인 대출은 2018년 4175만 원, 2019년 4408만 원, 2020년 4862만 원, 2021년 5202만 원 등 상승곡선을 그리다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2022년에 5115만 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인상 기조가 둔화한 2023년에 다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연체율은 2022년 0.43%에서 2023년 0.51%로 높아졌다. 연체율은 2018년 0.61%, 2019년 0.60%,

2020년 0.50%, 2021년 0.41%로 하락세를 이어가다 2022년부터 2년 연속 상승 중이다.

성별에 따른 직장인 대출 평균은 남자가 6377만 원, 여자가 3717만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0.6%, 1.1% 늘었다. 연체율은 남자가 0.57%, 여자가 0.40%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 1601만 원 ▲30대 6979만 원 ▲40대 7790만 원 ▲50대 5993만 원 ▲60대 3745만 원 ▲70세 이상 1853만 원으로 조사됐다. 29세 이하(-0.9%)와 30대(-0.7%)에서는 대출이 감소했지만 40대(2.0%), 50대(0.4%), 60대(0.1%), 70대 이상(1.4%)에서는 빚이 늘었다.

연령대별 연체율은 ▲29세 이하 0.49% ▲30대 0.31% ▲40대 0.46% ▲50대 0.66% ▲60대 0.86% ▲70세 이상 0.65%로 파악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 K-라이스벨트 성과에 아프리카 '리브콜'

K-품종, 맛·수확량 모두 우수

아프리카 대륙 내 'K-라이스벨트' 사업과 관련해, 벼 수확량 증가 등의 성과가 나오면서 해당 협력사업에 합류를 희망하는 국가가 점차 늘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확량이 많은 벼 종자를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기아 종식을 최종 목표로 내걸고 벌이는 국제농업협력 프로젝트 브랜드 중 하나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신규 희망국인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 기니비사우 3개국에 대한 현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K-종자의 현지 적응성과 농가 반응을 분석하기 위한 시범포 조성 사업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품종의 수확량이 현지 품종보다 23% 많게 나타났다. 또 재배 관리가 쉽



가나 농가에 생산성이 좋은 벼 종자가 보급되고 있다. /농식품부

고 병해충 저항성이 강하며 맛과 향이 현지 품종보다 우수하다는 현지 농민들의 평가가 나왔다.

시에라리온의 자카리아위 아흐메드 잘로 농업식량안보부 국장은 “이번 종자 시범포 사업을 통해 K-품종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돼 시에라리온의 식량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한전, 고졸 문 넓힌다... 3년간 300명 채용

한전-교육부, 고졸 채용 10배 확대 입사 후 학사학위 취득까지 지원 직업계고 출신에 전형 가점 부여

한국전력이 고졸 인재 채용을 10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입사 후 학사학위 취득을 지원한다. 27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과 교육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졸 채용 확대 및 경력개발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전과 교육부는 △고졸 채용 대폭 확대 △직업계고 취업 교육을 통한 입사 후 학사학위 취득을 포함한 경력개발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등 고졸 인재의 채용부터 경력개발 과정 전반에 대해 상호 협

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3개년간 총 300개(제한채용 170명, 인턴 130명)의 고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고졸 인재 채용을 획기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올해 고졸 인재 채용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87명을 채용하는 등 2022년~2023년 연간 10명 안팎이던 고졸 채용 인원을 향후 3개년 간 연평균 100명 수준으로 10배 가까이 확대한다.

또 한전과 교육부는 이날 협약에 이어 공동 채용설명회를 개최, 향후 교육부 '고졸만집' 시스템을 활용한 채용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가 추천한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고졸 에너지인재 취

업교육'을 시행, 우수 수료자에 대해 필기전형 가점(3~5%)을 부여해 채용 시 우대하기로 했다.

한전은 특히, 단순한 고졸 채용 확대를 넘어 입사한 고졸 사원의 역량 강화와 경력개발을 위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에너지 신기술 융합학과'를 올해 신규 개설했으며, 학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안중은 한전 경영관리부사장은 “한전은 학력 중심 사회에서 선취업·후진학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눈 덮인 길을 내딛는 첫걸음의 마음으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윤수 기자 hys@